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8년 3월 14일

제08-11호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에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

김한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배희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hybae@kiep.go.kr, Tel: 3460-1075)

주요 내용

-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투자내용, 운영방식, 자금조달구조, 지배구조 등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호주정부는 2008년 2월 18일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대호주 투자를 심사하는 데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웨인 스윈 호주 재무장관은 이 조치가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호주가 새로운 심사 강화 기준을 마련한 데에는 중국 자본의 급속한 유입 증가가 상당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짐.
 - 특히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 조치는 호주 자원시장 개발에 큰손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 호주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던 중국의 행동반경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출 정도가 중국에 비해 낮고 또한 투자 집행의 투명성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은 이 조치로 인해 호주 자원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와 관련 기업·기관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자, 한국의 6대 전략광종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국가인 호주의 최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임.

1. 머리말

- 호주정부는 2008년 2월 18일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대호주 투자를 심사하는 데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는 최근 국부펀드의 확산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선진국 정부들의 국부펀드 규제 움직임 중 하나로, IMF와 OECD도 국제 공조를 통한 국부펀드 관련 국제규범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투자내용, 운영방식, 자금 조달구조, 지배구조 등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우 풍부한 달러 보유를 바탕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M&A와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호주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늘어남.
- 호주가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대호주 투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에는 중국 자본 유입의 급속한 증가가 상당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짐.
 - 웨인 스윈 호주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함.
 - 그러나 최근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알루미늄과 미국 알코아(Alcoa)가 공동으로 호주 철강기업 리오틴토의 지분 9%를 인수한 것이 커다란 논란이 되는 등,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및 중동 산유국들이 호주의 안보·에너지 분야에서 영향력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중국 자본의 대량 유입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음.
- 호주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 기존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호주는 이미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

며, 외국정부 소유·지배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부여하였음.

- 호주의 이번 조치는 외국의 국부펀드, 특히 중국과 중동에서 유입되는 거대 자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의 호주 에너지·광물 자원시장 진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호주 국부펀드 심사 강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호주 국부펀드 심사 강화 조치의 배경

가. 세계 국부펀드 현황

- 국부펀드(SWF: Sovereign Wealth Fund)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외화자산을 재원으로 조성해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운용하는 투자기구를 지칭함.¹⁾
 - OECD는 국부펀드를 외화자산으로 기금이 조성된 정부소유의 투자기구(government-owned investment vehicles)로 정의하고 있음.
- IMF는 2007년 상반기 현재 약 30개 국가들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거나 설립 중에 있으며, 규모는 최대 2조 9,000억 달러로 세계 외환보유액(5조 달러)의 6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²⁾
 - 이는 2007년 글로벌 M&A 전체 금액(4조 4,800억 달러, Thomson Financial)의 약 65%에 이르는 규모로, 헤지펀드의 자산규모(1조 5,000억~2조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1) 한국은행, 「세계 국부펀드의 확대 배경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2007-70호(2007. 10. 2).

2) 위의 자료.

표 1.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

(단위: 억 달러)

국가	펀드명	최소	최대	재원별
아랍에미리트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5,000	8,750	상품펀드
싱가포르	Government Investment Corp.	1,000	3,300	비상품펀드
노르웨이	Government Pension Fund-Global	3,100	3,100	상품펀드
사우디아라비아 ¹⁾	No designated name	2,250	3,000	상품펀드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700	2,500	상품펀드
중국 ²⁾	China Investment Corp.	2,000	2,000	비상품펀드
러시아	Oil Stabilization Fund/National Welfare Fund	1,220	1,220	상품펀드
싱가포르	Temasek	800	1,000	비상품펀드
홍콩	Investment Portfolio(HKMA)	1,000	1,000	비상품펀드
호주 ³⁾	Australian Future Fund	430	430	기타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300	400	상품펀드
미국(알래스카)	Alaska permanent Reserve Fund	390	390	상품펀드
브루나이	Brunei Investment Authority	300	300	상품펀드
아일랜드	National Pension Reserve Fund	280	280	기타
한국	Korea Investment Corp.	200	200	비상품펀드
말레이시아	Khazanah National BHD	190	190	상품펀드
캐나다	Alberta Heritage Savings Trust Fund	170	170	상품펀드
카자흐스탄	National Fund	80	150	상품펀드
대만	National Stabilisation Fund	150	150	비상품펀드
뉴질랜드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100	100	기타
이란	Foreign Exchange Savings Trust Fund	80	80	상품펀드
칠레	Copper Stabilization Fund	39	60	상품펀드
인도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50	50	비상품펀드
보스니아 ¹⁾	Pula Fund	47	47	상품펀드
오만	State General Reserve Fund	20	20	상품펀드
아제르바이잔	State Oil Fund	16	16	상품펀드
베네수엘라	FIEM	8	8	상품펀드
트리니다드토바고	Revenue Stabilization Fund	5	5	상품펀드
키리바시	Revenue Equalization Fund	4	4	상품펀드
우간다	Poverty Action Fund	4	4	상품펀드
합계		19,940	28,930	

주 : 1)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중 투자 트란셰 포함. 2) 2007년 9월 29일 정식 출범. 3) 설립예정.

자료: Morgan Stanley, PIMCO, news articles, SWF websites, and IMF, 재인용: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 2007-70호(2007. 10. 2).

나. 선진국들의 국부펀드 규제 움직임

- 개도국들의 국부펀드가 자산운용의 다원화를 통한 안정성 및 수익률 제고라는 나름의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음.
- 일차적으로는 축적된 외화자산 등의 해외투자로 인식되기보다는 경제발전 등에 따른 경제력의 과시로 비쳐지고 있어 투자대상국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으며,
- 나아가서는 국부펀드의 운용이 해당국 정부에 의해 통제됨에 따라, 경제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선진국 전략산업(에너지, 통신, 금융 등) 중점의 투자로 이어져 투자대상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우려는 대규모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주로 중동이나 중국 등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국가라는 점에서 가중되고 있음.³⁾
-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개도국 국부펀드 및 국영기업 해외투자에 대해 투명성 제고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국부펀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OECD는 국부펀드의 지배구조나 목적 등에 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며 투자관행이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부펀드들이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⁴⁾ 정부소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미국은 IMF와 World Bank가 국부펀드의 자산운용에 관한 국제적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부펀드에 의한 자국기업 인수를 견제하기 위해 「엑스-플로리오 규정」(외국인투자 심사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정부 또는 대리인의 투자도 외국인투자 관련 필수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
- IMF와 EU에서도 자국으로 유입되는 국부펀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견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3)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UAE 아부다비투자공사는 설립 이후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운용내용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음.

4) OECD, International Investment Of Sovereign Wealth Funds(2007. 11. 16).

- IMF는 2007년 11월 라운드테이블을 조직하여 주요 국부펀드(28개국)의 펀드관계자와 재무부 및 중앙은행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부펀드 모범관행 수립에 관한 대화 체제를 출범시켰음.
- IMF는 2008년 3월까지 국부펀드의 핵심이슈 등에 관한 기초보고서를 마련하여, 4월에 개최될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에 제출할 예정임.
- 피터 만델슨 EU 집행위 통상집행위원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부펀드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표준에 관한 규범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부펀드들이 자발적으로 이 규범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제화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이 규범은 오는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될 EU 정상회담에 제출될 예정임.
- 이처럼 국부펀드에 대한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국부펀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3. 호주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위에서 언급된 국부펀드에 대한 선진국들의 우려는 비단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해외투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OECD는 국부펀드 및 국영기업의 해외투자가 진출국에 있어 안보적으로 민감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진출국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⁵⁾
- 따라서 호주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적용범위를 ‘국부펀드’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정부 및 외국 정부기관에 의한 투자’로 명시함.
- 호주 재무부가 2008년 2월 18일 발표한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관한 원칙」⁶⁾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외국정부 및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제안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의 [표 2]에 정리된 6가지 원칙을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5) OECD, DAF/INV/RD(2007)21, p. 2.

6) “Principles Guiding Consideration of Foreign Government Related Investment in Australia.”

- 호주 재무부는 특정 외국인투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불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호주정부에서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함.

표 2.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대한 6가지 가이드라인

6가지 가이드라인	비고
투자자의 경영이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 호주정부는 잠정 투자자가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함. - 또한 잠정 투자자의 정관(지배구조 협약)이 외국정부에 의한 실질적·암묵적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자금조달 구조를 포함) 여부를 판단함. - 투자자가 부분 민영화되어 있는 경우, 호주정부는 비정부 지분의 규모와 구성(지배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 등을 파악함.
투자자가 법률을 준수하고, 통상적인 상업 관행을 준수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정부는 투자자가 명확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의한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 및 감독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또한 호주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배구조 관행을 점검하며, 국부펀드의 경우 펀드의 투자정책 및 호주회사에 대해 어떠한 경로로 투자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함.
투자가 해당 분야/산업의 독점을 유발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항은 호주 경쟁정책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에 의해서도 검토됨.
투자가 호주정부의 재정수입이나 기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외국 정부기관에 의한 투자는 다른 여타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기타 정책(예컨대 환경 등)과 관련하여 호주정부의 방침에 부합되어야 함.
투자가 호주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정부는 특정 투자가 국가의 전략적/안보적 이익 수호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함.
투자가 호주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호주 기업의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정부는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호주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등을 검토하며, 핵심 검토대상에는 수입, 수출, 역내 가공, R&D 및 노사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호주정부는 외국인투자 후 유지될 기업의 소유, 지배, 관리에 대한 호주인의 참여도(고용자, 채권자, 기타주주의 이익을 포함)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임.

자료: 호주 재무부, "Principles Guiding Consideration of Foreign Government Related Investment in Australia."

- 이러한 6대 원칙은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님.

-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호주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음.

- 외국정부 관련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에 비해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아닌 호주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의 대호주 투자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규제’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호주정부는 외국정부 관련 기업,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중국 자본의 호주 유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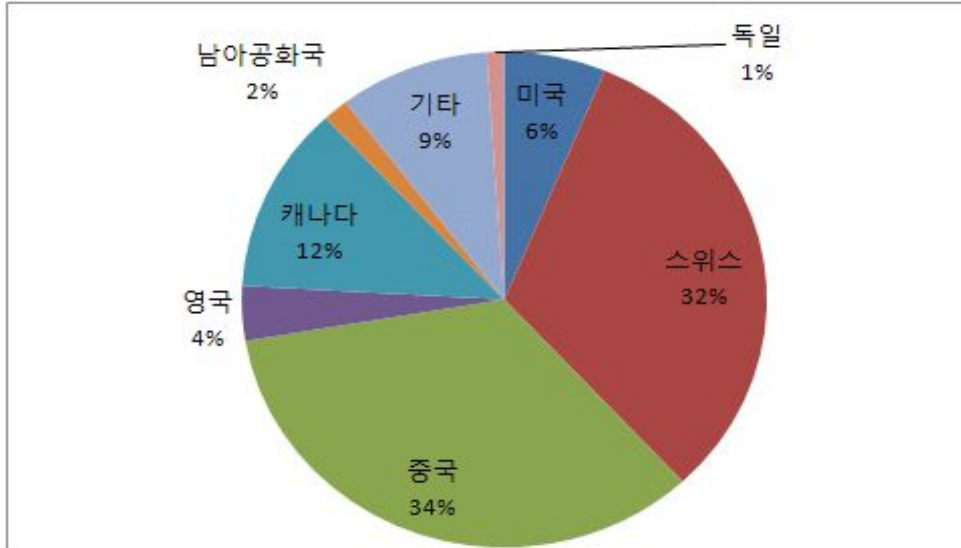
4. 한국의 대(對)호주 자원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호주 자원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하였으며, 호주에서는 이러한 중국 자본 유입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중국 최대 철강기업인 바오스틸그룹의 쉬러장 회장은 2007년 12월 초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을 제안하여 호주 리오틴토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⁷⁾
- 당시 리오틴토는 경쟁사인 BHP 빌리톤으로부터 1,33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쉬러장 회장은 BHP 빌리톤사의 제안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를 제안하여 리오틴토를 인수하겠다는 공격적인 제안을 함.
- 그러나 외국기업이 호주의 핵심 자산을 인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호주 국내의 반감이 증대되어 왔으며 정치적 논란으로 발전됨.
- 2005/06 회계연도 기간에 중국의 대호주 광업부문 투자는 승인기준 약 68억 호주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같은 기간 호주 광업부문 총 외국인투자의 34%에 달함(그림 1 참고).

7) *Financial Times*, 2007년 12월 5일 보도.

- 중국의 호주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는 2005/06년 이전에는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2005/06년에 단번에 최대 투자국으로 등장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호주 자원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호주 자원시장 외국인투자 비중(2005/06 회계연도 기준)



자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국제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호주정부는 자국의 에너지·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자본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과 호주 자원개발 시장이 중국 정부·기업에 편중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번 국부펀드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조치도 비록 '중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배경에는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급격한 중국 자본 유입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 투자자(기관)의 경영이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호주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겠다고 한 점 등은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임.
- 한국에 있어서도 호주 에너지·광물자원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임.
- 호주가 광업관련 투자시장으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①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고, ② 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투명성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③ 세계적으로 자원 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자국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④ 호주 자원개발 참여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호주의 세계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함.

- 특히 호주는 한국의 6대 전략광종의 보유와 생산량에 있어 세계 5위 이내에 드는 국가로, 한국의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됨.

표 3. 한국의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목표와 호주 보유·생산 현황

광종	2006년 자주개발률	2016년 자주개발률 목표치	호주 보유 및 생산 현황	
			매장량	생산량
유연탄	38.0%	50%	5위	4위
우라늄	-	15%	1위	2위
철	11.8%	30%	5위	3위
동	2.0%	35%	2위	5위
아연	31.0%	40%	1위	3위
니켈	-	30%	1위	3위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7년 8월 7일), ABARE 통계,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39호.

- 그러나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은 호주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짐.
- 2006년까지 누적기준으로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승인기준 30억 8,700만 달러에 이르며, 이중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21억 7,300만 달러로 전체 대호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이룸.
-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투자액을 살펴보면 비광업 부문의 투자집행률이 전체 승인액의 약 75%에 달하는 반면에, 광업의 경우 21억 7,300만 달러의 약 15%인 3억 2,500만 달러만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됨.
- 이는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한국 기업·기관의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호주 자원시장 개발에 큰손으로 등장한 중국을 겨냥하는 호주정부의 국부펀드의 심사 강화 조치는 중국의 진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의 여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는 여전히 자국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기관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중동지역 국가들에 편중된 자본 유입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호주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시장에서 독주 태세를 마련하였던 중국의 행동반경은 다소 위축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출 정도가 중국에 비해 낮고 투자 집행의 투명성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은 동 조치로 인해 호주 자원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와 관련 기업·기관은 이러한 기회를 살려 호주 자원시장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실시해야 함.
- 한국의 6대 광물자원 자급률 목표와 연관한 호주 자원시장 진출의 타당성과 시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 호주 자원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정부간 접촉을 통해 한국 자본의 자원시장 유입과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측면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함.